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2
----------	-------

발의연월일 : 2022. 1. 13.

발 의 자 : 변재일 · 안규백 · 위성곤  
윤관석 · 이원욱 · 이장섭  
이정문 · 임호선 · 정성호  
정태호 · 조정식 · 한준호  
홍성국 의원(13인)

### 제안이유

양자(量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양자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일부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만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양자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기술 격차를 좁힘으로써, 향후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자 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사.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기반,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양자산업 촉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및 시뮬레이터 등과 같이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을 지닌 원자 등을 조작·분석·제어하여 구현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기능의 소재·소자(素子)·부품·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내는 기초·응용 기술 등 과학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역학 원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양자기술을 구현·운영·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소

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작, 생산하거나, 양자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기술 관련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기술의 발전이 소관 사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 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양자기술에 관하여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제30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양자기술의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자기술과 양자지원기술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현황
4. 양자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전략 및 투자계획
5. 양자기술 연구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창업 및 벤처 지원,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기술사업화 등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

8.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인력 연계 방안

9. 양자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연구성과의 유출방지 방안

10.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표준화와 특허 등에 관한 사항

11.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국제협력, 양자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양자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자기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③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양자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양자종합계획의 확정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8조에 따른 양자기술 관련 법·제도의 개선요구

4. 산업 및 보안 등에 대한 양자기술의 파급력 점검 및 평가

5. 양자기술진흥 및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제30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7. 양자클러스터 지정, 해제 및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자기술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양자전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제도개선 요구 등) ①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및 인력 등 양자기술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외 기술, 기업, 시장 규모, 표준화, 특허, 법, 제도 동향 등 관련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의 장, 연구기관, 기업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통계작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통계작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통계작성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양자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1조(양자기술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2. 양자지원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
3.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 개발

4. 개발된 양자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5. 양자기술간 또는 양자기술과 타 기술과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
6. 그 밖에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과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양자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에 관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이 법에 따른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양자 산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자인력양성계획(이하 “양자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5조의 양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양자인력계획의 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양자인력의 수급전망
3. 국내외의 양자인력 관련 주요 제도와 예산 현황
4. 양자인력 양성 및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5. 양자인력의 정착 지원 방안
6. 양자분야 연구인력의 교류 및 유치 등 국제협력 방안
7. 양자연구 및 양자산업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 전공자 및 정보통신 전공자에 대한 인력전환 교육·훈련 프로그램
8.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규과정 또는 비정규과정의 양자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자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양자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양자기술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대학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단체 교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정책연구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3.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양자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제20조에 따른 시범사업
6. 제25조에 따른 표준화 지원
7. 양자기술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8. 그 밖에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양자기술 전문가단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기술 전문가단체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양자기술 전문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양자 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촉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을 위한 연구 장비·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구축, 운영, 지원 및 거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해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연구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전문 운영인력의 확보 및 관리방안,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유지·보수 및 고도화 방안, 연구에 필요한 소재·부품의 수급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시설 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양자기술 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목적성을 갖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자 센터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양자기술 전문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양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기초기술의 연구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와 연계한 인력의 양성·전환·정착에 기여하며, 공용 연구시설의 활용촉진, 산업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하여 양자기술 전문연구소(이하 “양자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양자 연구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설립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② 정부는 양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자 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실증 및 시범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양자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서비스의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증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증 및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실증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기술과 지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양자기술과 지원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양자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양자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자기술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테스트베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 국제표준의 인증·검증, 서비스의 개발 등을 위하여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이하 “테스트베드”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의 필요성, 테스트베드의 활용 정도, 구축 비용대비 성과, 국가 지원의 필요성,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매 5년마다 존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양자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효율적인 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양자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2.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술이전, 특허, 표준 현황
3.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인력 수급 현황
4.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기업 현황
5.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의 소재·부품 수급 현황
6. 국내 주요 연구 장비 등 국내외 시설에 대한 정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 연구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자기술정보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기술 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기술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자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자기술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양자기술 등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의 개발·이전·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제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등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보급·확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양자기술 등의 표준화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기업의 벤처·창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벤처·창업의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법률·경영·세무·특허 등의 상담
5.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물의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기술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양자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제28조(문화의 확산 장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양자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양자기술 및 산업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도입, 기반 구축, 양자산업 활성화, 제도 개선,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기업의 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2. 양자기술·서비스의 확산과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서, 교육, 세미나, 행사, 전시의 개최
3. 양자기술의 역사적·문화적 이해를 돕고, 양자기술·산업 활성화 사례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간의 설치·운영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기술 관련 문화의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양자전환) ① 정부는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분석 결과를 제5조의 양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등은 양자컴퓨터의 발전 등 양자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위협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장 양자클러스터

제30조(양자클러스터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 체계적인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양자클러스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운영, 해제 등 양자클러스터의 육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양자기술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양자클러스터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의 양성,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4. 양자클러스터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양자클러스터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양자클러스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양자클러스터계획 수립 이후 양자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자클러스터계획의 시행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를 지



정할 수 있다.

②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양자클러스터계획과의 부합성
3. 양자클러스터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양자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 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의 방법과 계획
7. 입주기업 및 연구소,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30조의 양자클러스터계획 수립 이후 양자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양자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요청  
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양자전략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자클러스  
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  
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양자  
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양자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양자클러스터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나 양자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양자클러스터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6항 중 “지정”은 “해제”로 본다.

제34조(양자클러스터 지정해제의 의제) ① 제31조에 따라 양자클러스

터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양자클러스터를 전혀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6항 중 “지정”은 “해제”로 본다.

제35조(양자클러스터 성과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양자클러스터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달리하거나 양자클러스터의 유지, 지원 규모의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양자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연구·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장 국제 협력

제37조(국제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수출, 공동 개발·구축, 해외 홍보 활동
3.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4. 양자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5. 양자기술 관련 인력의 해외연수 지원
6.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7. 양자기술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8. 양자기술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지원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양자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양자기술의 개발 및 이전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양자기술 분야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양자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양자기술 연구개발 촉진하고 양자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양자기술 연구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과 관련된 주거·교육·문화·의료 등의 지원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양자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연구인력과 연계한 국내 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3.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제4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기술의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 활동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양자연구센터, 양자연구소, 양자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장 특별회계

제43조(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4조(회계의 운용·관리) ①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예



수금

6.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투자·보조 또는 융자
  - 가. 연구개발 지원
  - 나. 연구장비 구축, 실증 및 성능검증 등을 위한 연구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다. 인력양성, 문화확산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
  - 라. 표준화, 특허,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에 대한 지원
  - 마. 창업 및 벤처 등 기업 육성 및 펀드 출자·투자 등 자금지원
  - 바.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  
련된 지원
  - 사. 실증, 시범사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지원
  - 아. 양자 연구소 등 거점시설에 대한 지원

자. 국제 협력 촉진 등을 위한 지원

차. 계획수립, 정책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카.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및 차입 원리금의  
상환

타. 그 밖에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양자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  
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  
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제47조(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8장 보칙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양자전략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4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과 제13조에 따른 양자인력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6조(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는 이 법에 따른 양자클러스터로 본다.